

안보리 결의 2087호와 북한의 대응

한 동 호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3-04

지난 12월 12일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이후 42일이 지난 시점에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안보리에서 통과되었다.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보리는 결의 2087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06년의 결의 1718호, 2009년의 결의 1874호를 확대·강화하는 유엔 차원의 대북 결의안이다. 이번의 안보리 결의 2087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총체적으로 드러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그 내용에 지정된 금수품목이 아니어도 무기개발과 관련된 품목의 수출을 전면 통제할 수 있게 한 ‘캐치올(catch-all)’ 및 북한이 기존의 제재에 대응해 사용해 온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언급하는 등 결의 2087호는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노력에 대한 원천적 봉쇄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안보리 결의 2087호와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 2087호는 우선 작년 12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로켓 발사가 기존의 안보리 결의 1718호 및 1874호를 위반했음을 명시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모든 관련 활동의 즉각적 중단,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시도 및 핵실험 금지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는 이어 기존의 1718호와 1874호의 제재 범위를 확대·강화하고 2012년 장거리 로켓발사를 주관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북한의

무기관련 거래에 관여한 동방은행 등 기관 6곳과 우주공간기술위 위성통제센터 백창호 소장과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 장명진 등 개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였다. 이들 개인 및 기관에 대해서는 여행 제한과 자산 동결을 명시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에 대해 기존의 결의 위반사항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6자회담 지지, 9·19 공동성명 이행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안보리는 북한의 향후 행태에 따라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함으로써, 단순한 제재 강화에 그치지 않고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예방적(preventive) 차원의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한국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드러났듯이 이번의 결의 2087호는 무기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북한 금융기관 관련 감시 활동 확대, 공해상 의심되는 선박 검색 강화 등 기존의 대북제재 시스템의 확대·강화라는 틀 속에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장거리 로켓발사의 총책임자 및 관련기관이 제재대상에 포함되어 북한의 향후 대륙간 탄도탄 개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응과 전략적 목표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통과된 직후, 외무성 성명(1.23)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북한 외무성은 “핵 억지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을 경고하며, 2006년과 2009년에 이은 세 번째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북한은 다음날 이어진 국방위원회 성명(1.24)을 통해서 더욱더 위협적 공세를 강화하였다. 국방위 성명에서는 “전면대결전에서 우리가 발사하게 될 위성과 장거리로켓도 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이번의 안보리 결의가 단순히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제재가 아닌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보다 크게 기인한다는 북한의 인식을 분명히 드러내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성명(1.25)을 통해 한국의 유엔 제재 참여 관련,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였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일련의 북한의 반응과 전략은 다음의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물리적 대응 조치’ 혹은 ‘높은 수준의 핵실험’에 대한 언급이다. 북한은 2012년 4월의 로켓발사 실패 이후 12월의 은하 3호 발사 성공 관련,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업적으로 강하게 선전하였다. 김정은이 부친의 ‘선군정치’ 지속·유지 및 발전이라는 향후 과제와 인민생활향상으로 대변되는 ‘선경정치’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관점에서, 핵 및 미사일 카드를 활용한 외부위

협 증대 및 내부단결 강화는 결코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전략일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월의 은하 3호 발사 시도 및 성공은 이러한 북한체제의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 추구가 권력의 대내적 공고화라는 국가적 우선순위를 앞설 수 없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물리적 대응 조치가 3차 핵실험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동기와 핵무기의 소량화, 경량화라는 기술적 동기의 결합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장거리 로켓 혹은 위성 발사 이후 핵실험을 감행한 경험이 있으며, 특히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 공장을 공개하는 등 향후 핵실험에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둘째, 비핵화 담론의 전면배격 및 평화체제 논의 강화 전략이다. 북한은 이미 2009년의 2차 핵실험 이후 공공연히 ‘핵보유국’임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사고는 대미 핵협상의 틀에서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핵보유국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아닌 핵 군축 회담을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의 대북정책이 ‘비핵화’라는 목표에 집중되어 있음을 상기할 때, 북한의 이번 반응은 2009년 이후 지속되어 온 북한의 ‘평화체제’ 담론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의 가능성은 배제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는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선(先) 평화협정의 관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 언급된 외무성 성명과 국방위 성명 공히 ‘비핵화’ 논의의 가능성을 부정한 것과 성명의 주요 대상이 미국을 직접 겨냥한 것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과 주변국의 정책적 공조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1월 23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특사에게 “한반도 비핵화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가 한반도 평화 안정에 필수 요건”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 최고지도자의 이러한 언급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대해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천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도리어 북한은 결의와 관련, 미국과 한국을 비난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큰 나라들까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및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 속에 이미 두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했던 북한 지도부는 핵실험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결정만을 앞두고 있을 것이다. 지난 12월의 은하 3호 발사와 이번의 결의 2087호는 외부위협 조성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층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한국과 중국, 미국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들의 새 지도부가 등장하고 형성되는 현 시점에 각국은 불필요한 위기와 긴장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1월 24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핵실험을 포함한 북한의 추가 도발이 북한정권을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였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도 1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냉정과 자제를 통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변국의 기대와 바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벼랑끝 외교를 추구한다면,

동북아 안보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주변국과의 공조 속에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거머쥐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면밀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향후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얻는 것 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선제적(proactive)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북한은 ‘비핵화’ 논의 자체를 제외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는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자기에게 유리한 협상을 위한 전술적 측면임을 명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의 전술적 모순의 틈을 잘 짚어 북한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관국 간 정책공조의 틀을 더욱 확고히 구축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KINU 201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